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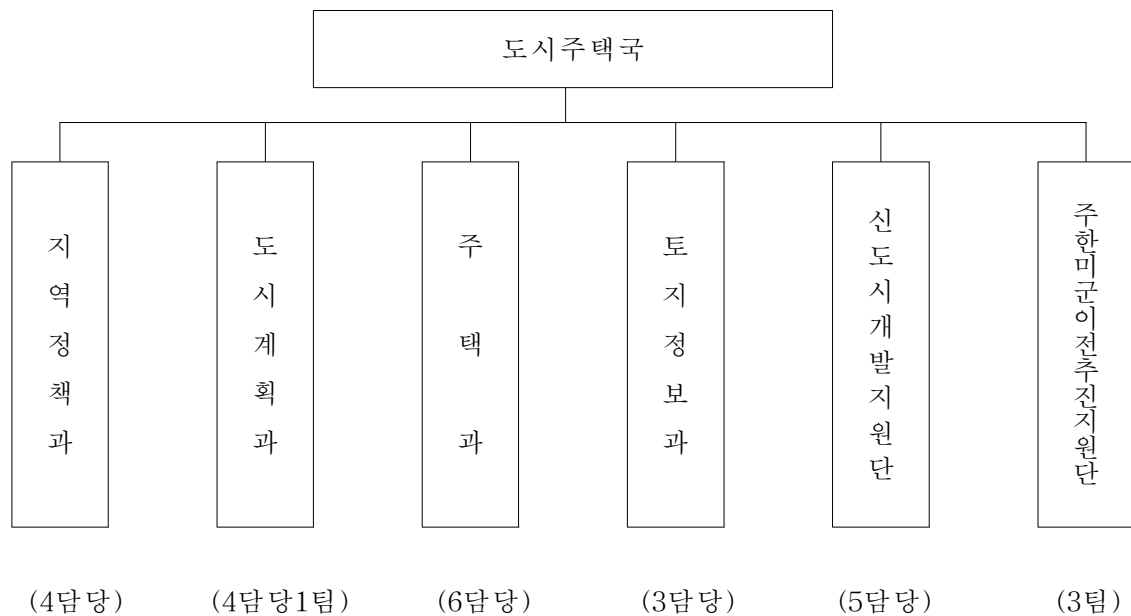
<업무보고 : 도시주택국>

업 무 보 고

I. 일반현황

기구 및 인력

□ 기 구 : 4개과 2단 22담당, 4팀



□ 정 원 : 146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별정	기능
합 계	146	1	6	27	41	52	8	3	8
지역정책과	35	1	1	5	7	14	1	3	3
도시계획과	26	-	1	5	9	9	1	-	1
주 택 과	32	-	1	6	9	13	2	-	1
토지정보과	17	-	1	3	6	6	-	-	1
신도시개발지원단	25	-	1	5	7	7	4	-	1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	11	-	1	3	3	3	-	-	1

주요기능

과 별	주요기능
지역정책과	· 계획적 관리를 위한 수도권정책 추진 ·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 지역개발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 개발제한구역관리 ·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및 토지수용 업무
도시계획과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개발행위허가 ·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인가
주택과	· 주택종합계획 수립 · 농촌마을 개발, 오지·도서·소도읍개발사업 · 건축법·건축사법·주택법 운용 · 주택재정비(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 옥외광고물 관리
토지정보과	· 토지거래 허가, 개별공시지가 운용,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 지적측량, 지적업무계획 수립 관리,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전산운영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신도시개발 지원단	· 신도시 관련 행정 종합조정 ·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관련 업무 ·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광교테크노밸리 건설 사업 추진
주한미군 이전추진 지원단	·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지원 · 한·미간 친선교류협력 추진 · 국제평화 자유도시 건설 추진 ·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추진

예 산 규 모

□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05년도	2004년도	증 감	비 고
계	127,197	140,463	-13,266	'04년 대비 9.4% 감소
경상예산	1,053	1,024	29	
보조사업	40,635	44,472	-3,837	
자체사업	85,463	94,949	-9,486	
기타(예비비등)	46	18	28	

※ '05년도 도 전체예산 9조 6,328억원의 1.32%('04년도 9조 5,084억원의 1.48%)

□ 부서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계	경상예산	보조사업	자체사업	기타 (예비비 등)	비 고
계	127,197	1,053	40,635	85,463	46	
지역정책과	53,172	224	7,315	45,606	27	
도시계획과	18,171	178	-	17,974	19	
주택과	48,684	210	32,122	16,352	-	
토지정보과	1,889	172	1,198	519	-	
신도시개발지원단	111	107	-	4	-	
주한미군이전 추진지원단	5,170	162	-	5,008	-	

□ 주요 투자사업 현황

- 동북부 특화발전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도시계획 도로사업
- 주거환경 개선 및 농어촌 및 낙후·소외지역 생활편익시설 기반확충

- 토지정보망 구축 및 주한미군이전 특별지원 사업 등

기 본 통 계

- 수도권정비계획 권역(도 전역 10,184km²)
 - 과밀억제권역(1,172km² 11%) · 성장관리권역(5,169km² 51%)
 - 자연보전권역(3,843km² 38%)
- 용도지역(도 전역 10,184km²)
 - 도시지역(2,902km² 28.5%) · 관리지역(3,286km² 32.3%)
 - 농림지역(3,723km² 36.5%) · 자연환경보전지역(273km² 2.7%)
- 개발제한구역 : 1,270km²(도 전체의 12.5%)
 - 대상 : 21개 시·군
 - 구역현황 : 95천가구 268천명
- 군사시설보호구역 : 2,362km²(도 전체의 23%)
 - 해당 시·군 : 25개 시·군(수원, 안산, 군포, 하남, 의왕, 오산 제외)
 - 구역현황 : 통제보호 403, 제한보호 1,959
- 주택 : 2,634천호/2,716천가구(보급률 97%)
 - 단독주택 585, 아파트 1,583, 연립 240, 다세대 226
- 지적 및 공부
 - 지적(10,184km²) : 임야 5,617, 답 1,463, 전 987, 대지 397, 기타 1,720
 - 지적공부
 - 대 장 : 4,252천매(토지 3,861, 임야 391)
 - 도 면 : 89천매(지적도 71, 임야도 5, 수치지 13)

도시주택 분야 주요시책 지표

분 야	단 위	2004	2005	2006
•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개소	사업선정	9	-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	개소(누계)	41	88	198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개소(누계)	114	504	559
•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개소(누계)	76	135	255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마을(누계)	22	43	65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지구(누계)	11	12	21
•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구(누계)	18	19	23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군(누계)	21	27	31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군(누계)	14	17	31
• 국민임대주택 건설	천호(누계)	32	64	96
•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개소(누계)	7	15	17
• 농어촌 기반시설 정비	개소(누계)	9	14	20
• 농촌생활환경 정비	개소(누계)	19	41	63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개소(누계)	4	12	-
• 개별공시지가 시행	횟수	2	2	2
•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누계)	50	90	100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누계)	69	75	82
• 광고테크노밸리 건설	%(누계)	10	20	30
• 판교신도시 건설	%(누계)	20	30	40

※ 단년도 사업은 당해연도 지표 기재 / 계속사업은 누적 지표 기재

중앙부처 국비확보 현황('06)

(단위 : 백만원)

소관부처	사 업 명	확보액	비 고
계	8건	35,504	
건설교통부 (1건)	주거환경개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8,153	
행정자치부 (5건)	소도읍육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350	
	도서종합개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94	
	농어촌마을정비사업 (일반 국고 보조금)	6,000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일반국고 보조금)	522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 (일반국고 보조금)	21	
농림수산부 (2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312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4,752	

II. 2005년 업무추진 성과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 전환 추진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의원 입법발의
 - 한선교 국회의원('05. 5. 17)
 - 접경지역 수도권 규제 제외, 공장총량제 폐지 등
 - 김영선 국회의원('05. 10. 14)
 -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지정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입법예고(건교부)
 -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 규제 개선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마련('05. 10. 5, 건교부)
 -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도권정비발전계획”으로 개편
 -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기본계획 운영관리기준 마련 반영('05. 7. 27)
 - 각종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권한 이행시 검토반영
- 동·북부 특화사업 추진(기본 및 실시설계 : 9개 사업)
 - 사업비 교부 : 450억원 중 204억원 교부(잔액 246억원 연내 교부 예정)

2. 법령·제도개선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 경기도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안)마련
 -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입안시 입안기준으로 활용
- 주거복지 및 환경·주택관리의 체계 확립
 - 경기도 주택조례 제정시행('05. 6. 15)
- 현안사업 적기시행을 위한 GB 관리계획 변경수립(2회)
 -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추진
 - 해제완료 : 수원시 벌터취락 등 214개소 9.6km²
 - 해제신청 : 하남시 둔치취락 등 290개소 25.3km²
 - 시·군입안 : 광명시 두길취락 등 55개소 3.88km²
-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취락지구지정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 취락지구지정 : 군포시 등 9개 시·군 130개 취락(2.9km²)
 - 주민지원사업 지원 : 11개 시 21개 취락 10,820백만원
- 경기도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05. 3)
- 미집행 대지보상비 및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지원

- 21개 시·군 179억원 지원(도비)
-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제도 시행
 - 정기분(1.1) : 360만 2천필지, 수시분(7.1) : 9만 6천필지
-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추진 : 성남시 등 16개 시·군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신규 착수 : 양주 등 3개 시·군
 - 14개 시·군에 국·도비지원 : 1,156백만원
-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도비 특별지원
 - 광역상수도 설계비 8억원, 도로 확·포장 42억원

3. 쾌적한 도시 및 주거공간 마련

-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 건교부신청(4), 도 검토 중(7), 시·군 입안 중(8)
-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 완료(1), 건교부 신청(2), 도 검토 중(4), 시·군 입안 중(14)
-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 8개 지구 2,584천㎡
- 도시개발구역지정 : 1개 지구 244천㎡
- 주택건설 추진 : 66천호(공공 5, 민간 61)
-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11개 지구 완료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 8개 사업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추진 : 8개소 8km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 13개 시·군 27개소
- 광고테크노밸리 개발계획 승인신청('05. 9. 27)

Ⅲ. 주 요 업 무

1. 수도권외의 계획적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정책 전환 추진

- ◆ 수도권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육성을 위한 확고한 기틀 마련
- ◆ 계획적 관리체제를 통한 난개발 방지 및 수도권 경쟁력 강화

□ 도 정책 방향

-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정책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현행 수도권정책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

- 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확대하여 광역인프라의 효율적 공급을 통한 과밀해소 및 국제기능 강화,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및 경기도 세부추진계획상 도 발전전략 마련
 -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본계획 반영 및 정비발전지구 지정
- 수도권을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공장총량제 폐지, 산업단지 공급물량 확대, 대기업 첨단산업 관련 규제개선 등
- 경기 동·북부지역 균형발전 도모
 - 환경관련법과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적 개선 (권역의 수계별 관리, 친환경적 관광지 조성사업 확대 허용 등)
 - 접경지역은 남북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 제외

□ 그간 추진실적

- 수도권 계획적 관리 전환 및 규제개선 건의(5회)
- 한선교 국회의원 수정법 개정안 발의(9. 13, 건교위 상정)
 - 접경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공장건축총량제 폐지, 연수시설 규제대상 제외,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허용 규모 확대
- 수정법시행령 입법예고('05. 07. 15)
 -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 허용규모 확대
- 건교부 도 의견이 반영된 수정법 개정안 의견조회('05. 10. 05)
 - 공공기관 이전부지, 낙후지역,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역에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
-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간담회 및 기관방문(국회의원, 건교부 등)

□ 향후 계획

- 수도권규제 개선을 위한 수정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도내 낙후지역,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지역 등 정비발전지구 지정
 -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허용규모 확대 등
- '06. 상반기 완료예정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도 의견 반영
 - 정비발전지구 각 지역별 지정
 - 산업단지 공급물량 확대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계획적 관리 내용 반영 등
- ※ 당초 '05. 6월 완료예정(건교부)
-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조하여 수정법 개정안 발의 지속 추진
- 최종 목표인 대체입법 제정 추진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추진

- ◆ 재정력지수가 낮은 동·북부권 낙후지역 시·군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지역발전 기틀 조성
- ◆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특화발전사업 조속시행으로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균형발전 발판 마련

□ 사업개요

- 지원 시·군 : 경기 동·북부지역 9개 시·군
 - 포천, 안성, 하남, 양주, 여주,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 사업기간 : '04년~'08년
- 사업비 : 900억원('04년 450, '05년 450)
 - 지원기준 : 시·군별 100억원
- 시·군별 추진사업

- | | |
|--------------------|--------------------|
| · 포천시 : 포천석 아트밸리 | · 동두천시 : 동두천싸이언스타워 |
| · 연천군 : 역사 문화촌 | · 여주군 : 수생야생화생태단지 |
| · 양주시 : 첨단섬유산업클러스터 | · 가평군 : 소천지 공원 |
| · 양평군 : 전통생태산촌마을 | · 안성시 : 안성마춤문화랜드 |
| · 하남시 : 애니메이션 벤처단지 | |

□ 그간 추진실적

- 특화사업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속적 협의 및 지도관리
 - ⇒사업 추진상황 수시확인을 통한 계획적 추진 유도
-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토지이용도를 고려한 시설배치 등 행정절차 이행 중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05. 12월 완료 목표)
 - 도시관리계획 및 용지보상 추진(부지확보 완료 : 하남, 동두천, 양평)
- 조기 사업착공을 위한 특화사업비 적기 교부
 - 금년 450억원 중 204억원 기교부, 잔액 246억원 연내 교부예정

□ 향후계획

- 연내 착공 : 3개 시·군(포천, 동두천, 여주)
- '06년초 착공 : 6개 시·군(양주, 안성, 하남, 연천, 가평, 양평)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 ◆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취락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계획 변경 수립 등의 적기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추진

□ 기본방향

- 취락지구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계획변경 수립 등

□ 그간 추진실적

- 취락지구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 17개 시·군 255개 취락 7.5km² 중 130개 취락 지정완료
 - ※ 2청 소관 : 5개 시·군 115개 취락 2.9km²
 -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 11개 시 21개 취락 10,820백만원(국비)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대책 수립 시행
 - 대상 : 21개 시·군, 1,270km²(2청 5개 시 포함)
 - 인구, 면적, 행정대집행, 조치실적에 따른 구역관리비 지원(국비 2,135백만원)
 - 관리 실적에 따른 상사업비 지원 : 도비 300백만원
 -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장비 임차·구입 등 실질적 지원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2회)
 - 대상 :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 등

□ 향후계획

- 취락지구 지정대상 중 미 지정된 125개 취락 조기지정
- 주민지원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주민 생활환경 조기개선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변경) 수립
- 불법행위 방지대책 수립·추진으로 자연환경 보전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추진

-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집단취락 우선해제 조기추진으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
- ◆ 선계획-후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계획적 취락정비로 생활환경 개선

□ 사업개요

- 대상취락 : 수원시 등 20개 시·군 559개 취락 38.8km²
· 주택이 20호 이상(밀도 10호/ha)인 집단취락

□ 추진방향

- 주민 생활불편 조기 해소를 위해 구역해제와 용도지역변경 동시 추진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추진
· 저층·저밀도의 개발과 주거생활과 관련 없는 시설 입지제한
- 자족기능을 갖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자원 확보방안 마련(기반시설부담계획 등)

□ 그간 추진실적

- 해제완료 : 수원시 벌터취락 등 214개소 9.6km²
- 해제신청 : 하남시 둔치취락 등 290개소 25.3km²
- 시·군입안 : 광명시 두길취락 등 55개소 3.88km²

□ 향후계획

- 해제 신청된 290개 취락에 대하여 주민생활불편 조기해소를 위해 2005년까지 해제완료 추진
- 시·군 입안 중인 광명시 등 3개 시·군 55개 취락은 2006년 3월까지 해제 완료 되도록 행정지도 감독 강화

2. 선계획-후개발 도시정책 추진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 ◆ 도시 공간구조를 정립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 ◆ 도 전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 사업개요

- 도시기본계획 수립 : 31개 시·군(완료 21, 수립 중 10)
· 수립 중 : 이천, 광주, 용인, 평택, 여주, 양평, 파주, 포천, 가평, 연천
- 도시관리계획 수립 : 31개 시·군(완료 14, 수립 중 17)
· 수립 중 : 화성, 김포, 안성, 이천, 광주, 용인, 평택, 여주, 양평, 고양, 남양주, 파

주,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 그간 추진실적

○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 건교부신청(4) : 용인, 양평, 포천, 가평
- 도 검토 중(7) : 파주, 연천, (부천, 광명, 안성, 고양, 동두천)
- 시·군 입안 중(8) : 이천, 평택, 여주, 광주,(시흥, 의왕, 의정부, 남양주)

○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 완 료 (1) : (김포 통진)
- 건교부 신청(2) : 화성 동부, 김포 중남부
- 도 검 토 중(4) : 안성, (평택 진위, 용인 용인지역, 구리)
- 시·군입안중(14) : 이천, 용인, 평택, 광주, 여주, 양평, 고양, 파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양주, 가평, 연천

※ ()내서는 기존 도시지역에 대한 변경수립 내역임

□ 향후계획

○ 「도시기본계획」은 '06년 상반기 중 수립완료

- 입안 중인 시·군에 대하여 조속 수립토록 행정지도 강화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결과를 반영 수립

- 입안 중인 14개 시·군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즉시 입안 완료토록 지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도시기반 확충

- ◆ 10년 이상 미집행된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조정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 ◆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도 차원의 대지보상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군의 미집행시설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추진

□ 사업개요

○ 미집행시설 현황

- 시설결정 : 641.1km²
- 사업집행 : 454.9km²(집행률 71%)

- 미 집 행 : 186.2km², 사업비 27조 3천억원
-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 138.3km², 사업비 16조 3천억원

□ 그간 추진실적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관련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지속건의('99~'03)
- 장기미집행시설해소 관련 국가재정지원 합의('04. 12. 31)
 - ※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 중앙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획('05. 4. 1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토지매수청구 활성화를 위해 '06년~'19년에 총 5,600억원 지원(연간 400억원)
- 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 및 도시계획도로사업비 지원('05. 6월)
 - 2005년 21개 시·군 179억원(도비)

□ 향후계획

-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조정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지속건의 및 자체재원 확보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 개발가용토지에 대한 계획적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 지역주민에 의한 민간제안 방식 적극 수용으로 개발행정 증진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도시지역 안 : 주거 및 상업지역 1만m² 이상, 공업지역 3만m² 이상
 - 도시지역 외 지역 : 30만m² 이상
- 도시개발사업
 - 추진 중 : 29개 지구(토지구획정리 11, 도시개발사업 18)
 - 계 획 : 15개 지구(토지구획정리 10, 도시개발사업 5)

□ 그간 추진실적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 11개 지구 3,412천㎡
 - '05년 토지구획정리사업 : 5개 지구(교통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
 - 평택 서재·배미·안중·송담, 여주 하리1
 - '05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 8개 지구 2,584천㎡
- 도시개발구역지정완료 : 19개 지구 6,457천㎡
 - '05년 도시개발구역지정 : 1개 지구 244천㎡(화성 조암)
 - 4개 지구는 구역지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중
 - ※ 화성 남양2·병점, 김포 길포, 고양 벽제1

□ 향후계획

- 토지구획정리사업 5개 지구는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시행인가
- 도시개발사업 4개 지구는 행정절차 이행 후 개발구역 지정

3.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 추진

- ◆ 장기 주택종합계획 수립으로 경기도 주택정책 방향 설정 및 건축 행정건실화 추진을 통해 친환경 고품질 건축 유도
- ◆ 도민의 주거안정과 다양한 주택건설로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

□ 사업개요

- '05 경기도 주택종합건설계획 : 총 153천호(공공 53, 민간 100)
 - ※ 국민임대주택건설 계획 : 28천호(전국 100만호)
- 『경기도 주택조례』 제정시행 및 『장기 주택종합계획』 수립추진
- 친환경 고품질 건축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그간 추진실적

- 주택건설 추진 : 66천호(공공 5, 민간 61)
 - ※ 국민임대주택건설 추진 : 0.8천호('05년까지 143천호 건설)
- 『경기도 주택조례』 시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체계적 주택관리
- 『경기도 장기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 경기개발연구원 용역 추진 중('05. 3.~'05. 12월)

- 친환경 고품질 건축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내실있는 건축위원회 운영을 통한 고품격 환경친화적 건축 유도
 - 건축행정 워크숍을 통한 건축행정 지속 연찬

□ 향후계획

- 도민 주거안정 도모 및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속적 모색
- 중장기 장기 주택종합계획수립 용역 마무리('05. 12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 ◆ 도시 노후·불량밀집 주거지역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 ◆ 도시 저소득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계층간 위화감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1~2005(제1단계 : 5개년 연차사업)
- 대 상 : 8개 시 28개 지구
- 사업내용 : 도로,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 등
 - ※ 사업시행방식 : 현지개량 및 공동주택 방식
- 연차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지 구 수	28					
국고지원액(50)	44,371	9,848	7,940	10,875	7,931	7,777
교 부 세(10)	7,101	1,969	2,255	1,229	1,648	
지방비(도/시:50/50)	39,006	7,878	9,457	8,718	6,731	6,222
총 사 업 비(100)	90,478	19,695	19,652	20,822	16,310	13,999

□ 그간 추진실적

【제1단계사업】

- 8개 시, 28지구(완료 11, 추진 중 17), 90,478백만원

【제2단계사업】

- 9개 시, 20지구(공동주택 9, 현지개량 11)

※'04 지구확정, 해당 시, 지구별 용역 진행 중

□ 향후계획

- 『제1단계 사업』 추진 중인 17개 지구는 금년말까지 완료
 - 각 지역별 추진실태 면밀 파악, 수시로 행정지도 및 지원
- 『제2단계 사업』 9개 시 20지구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
 - ※ 사업시행 : 2006년~2010년(5년간)

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의 체계적 정비·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가로환경 조성

□ 기본방향

- 옥외광고물의 계획적·체계적 관리
 -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 광고물표시기준지침 적용·관리
 - 기존 시가지 ⇒ 특정구역으로 지정 관리
-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사업 지속 추진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시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 불법·유해광고물의 지속적 정비

□ 그간 추진실적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 운용
- 시·군별 옥외광고물관리 특정구역 지정·운영
 - 13개 시·군 27개소(70.76km, 27,762.4㎡)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시범사업 추진
 - 사업량 : 용인시 한국민속촌 진입로 등 8개 시 8개소(8.0km)
 - 사업비 : 7,150백만원(도비 3,575백만원, 시비 3,575백만원)
 - 사업내용 : 표준모델개발, 간판철거·교체 등 정비
 - ※ 제2청 관할 4개 시 4개소(11.7km), 사업비 : 2,410백만원
- 불법·유해광고물 지속적 정비
 - 민간단체를 통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비 : 1,005백만원)
 - ※ 정비실적 : 9,771,177건(전년 동기 대비 274% 증가)

□ 향후계획

- 옥외광고물의 계획적·체계적인 관리
 - 특정구역 지정·관리(8개 시·군 8개소)
- 불법·불량 옥외광고물 지속적 정리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8개 시·군 8개소)

농어촌 및 낙후·소외지역 생활편익 기반확충

- ◆ 농어촌과 개발이 뒤떨어진 낙후·소외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정주환경 조성
- ◆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상대적 낙후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8개 사업		41,307	
농어촌 기반시설정비	5개 지구	5,051	
농촌 생활환경정비	9개 시·군 22개 면	16,998	
농촌 생활용수개발	14개 지구	2,380	
농어촌 주택개량	280동	8,400	동당 30백만원
농어촌 빈집정비	254동	102	동당 40만원
도서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5개 시·군	2,144	
소도읍육성사업	2개시·군 2개 읍	4,000	읍당2,000백만원
민북 개발사업	1개 시 2개 면	2,232	도 자체 사업

□ 그간 추진실적

- 마을 하수처리 및 기반시설 정비 : 4개 시·군 5개 지구
-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9개 시·군 22개 면
- 상수도 계획이 없는 자연마을의 생활용수개발사업 : 8개 시·군 14개 지구
-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 : 9개 시·군 534동
- 도서 및 오지마을 기반시설 확충 : 5개 시·군 2개 도서
- 소도읍육성사업 : 2개 시·군 2개 읍

- 평택시 팽성읍 열린광장 조성사업 등 6건
- 양평군 양평읍 강변문화권 조성사업 등 7건
- 민북개발사업 추진 : 1개 시 2개 면

☐ 향후계획

- 농어촌기반 시설정비 등 8개 사업 금년내 완료 추진

4.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토지관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제도 시행

-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지가검증으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인터넷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로 도민 서비스 향상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정기분(1. 1 기준) : 360만 2천 필지
 - 수시분(7. 1 기준) : 9만 6천 필지
- 기본방침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 지가조사요원의 실무교육 강화 및 공시지가의 인터넷 열람 공개

☐ 그간 추진실적

<정기분 : 1. 1 기준>

- 지가산정 및 검증 : 3. 2~4. 20
-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 4. 21~5. 10
- 결정·공시 및 소유자 개별통보 : 5. 31
-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6. 1~6. 30
- 이의신청분 검증 심의 및 결과 통보 : 7. 30까지

<수시분 : 7. 1 기준>

- 지가산정 및 검증 : 8. 19~9. 1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9. 12~10. 4

⇒ 경기넷 D/B구축 및 열람서비스 실시

- 결정·공시 및 소유자 개별통보 : 10. 31

□ 향후계획

-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11. 30까지
- 이의신청분 검증 심의 및 결과 통보 : 12. 30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 ◆ 현행 불합리한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 체계로 개선
- ◆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7~2009년
 - 1단계('97~'99) : 시범사업
 - 2단계('99~'04) : 도시(동)지역 확대
 - 3단계('04~'09) : 농촌(읍·면)지역 확산
- 사업량 : 31개 시·군(완료 16, 추진 중 14, '06 착수 1)
- 사업내용
 - 도로명칭 및 건물번호 부여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 D/B구축 및 안내지도 제작·보급과 활용안내 홍보

□ 그간 추진실적

- 용인 등 14개 시(도·농복합시)·군 시설사업 추진
 - 3개 시·군(양주, 연천, 양평) 사업 착수 : 13% 추진
 - 용인 등 11개 시·군 도로명칭부여 등 시설물설치 : 44%추진
- 시설설치 완료지역(16개 시) 활용 기반조성 추진
 -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시스템 웹 서비스 시행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보급 : 2,236,788부
 - 공문서, 세금고지서 등의 도로명주소 병기 사용 : 2,750,649건
 - TV지역방송, 극장 등 다중 활용매체 송출용 도로명주소 홍보CM 배부
 - 극장용 필름 188개, DVD 80개, VTR 32개

□ 향후계획

- 2009년까지 용인시 등 15개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 사업 마무리
- 완료지역의 활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활용기반 조성
 - 도로명주소 위치검색시스템 구축 및 일간지 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 ◆ 토지관련 각종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을 통한 대민 서비스 개선
- ◆ 토지관리 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과학적인 토지정책 수립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2006
- 사업량 : 도 및 31개 시·군
- 사업비 : 14,220백만원(국비 65%, 지방비 35%)
- 사업내용
 - 토지관련 각종 공간·속성자료 표준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 속성자료 : 토지(임야)대장, 토지관리 각종 대장, 공시지가 등
 - 공간자료 : 지적(임야)도, 각종 용도지역(지구)도, 지형도 등
 - 유관기관간 초고속망 연결을 통한 신속·정확한 토지정책자료 수집·제공
 -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중개업, 공시지가, 용도지역, 외국인 토지 관리

□ 그간 추진실적

- 완료지역(수원시 등 15개 시·군) 토지관련 전산 민원처리 확대
- 성남시 등 16개 시·군 : '05. 12월말 완료예정
- 인터넷 서비스 실시를 위한 도 서버시스템 구축 완료
 - 사업비 380백만원(도비 100%)

□ 향후계획

- 토지종합정보망 활용 토지거래관리 등 업무 시험 활용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시험운영 : '06. 1~3월
- 토지관련 민원 전국 인터넷 발급 실시 : '06. 4월

5. 현안사업

광고테크노밸리 건설 추진

- ◆ 산·학·연이 연계된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형 행정복합도시 건설
- ◆ 도로·전철 등 주변도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
- ◆ 광고산 일원의 생태 녹지축을 연결하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계획도시 건설

□ 사업개요

-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용인시 상현동 일원
- 면 적 : 1,127만 m²(341만평)
- 수용계획 : 60,000명(24,000호) - 2.5인/세대당
 - ※ ha당 인구 밀도 : 54인(분당 199, 일산 175 중동 304, 평촌 329, 산본 399)
- 사 업 비 : 8조 4천억원(보상비 3조 8천억원, 공사비 4조 6천억원)
- 사업기간 : 2004~2010년
- 시 행 자 :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공동시행)
 - ※ 토지이용 기본구상(안)

합 계	주택	상업업무	도시지원(R&D)	공공용지(공원녹지)
100(%)	19.8	2.9	4.5	72.8(45.9)
341(만평)	67.5	9.8	15.5	248.2(156.4)

□ 그간 추진실적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04. 6. 30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2회)
- 신도시 개발구상 단계부터 시민·환경단체 참여('04. 1~4)
 - 개발계획 구상단계부터 주민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설명회 : 3회)
 - 개발구상 도민아이디어 제안 창구운영(경기넷, '04. 5~12 : 221건 제안)
 - 전국민 대상 신도시 명칭 공모선정('04. 7~8 / 1,347건, 채택 : 광고테크노밸리)
- 개발구상(안) 도의회 보고 : '05. 5. 19
- 개발계획(안) 시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 경기도친환경신도시자문단 회의('05. 6. 9)
 - 광고테크노밸리 포럼개최('05. 6. 21)

- 시민·환경단체 간담회(4회)
- 정부 8·31부동산대책 관련 관계전문가 회의('05. 9. 6)
- 광고테크노밸리 홍보추진
 - TV, 라디오, 신문매체 등 광고('05. 7~10)
 - 광고테크노밸리 종합홍보물(CD) 배부('05. 5. 3)
 - 광고테크노밸리 홈페이지 개설('05. 6. 10)
 - 개발구상 정립에 따른 홍보기본계획수립 시행추진('05. 8~'06. 12)
- 개발계획(안) 사전협의 : '05. 6. 8~'05. 6. 30
-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관련기관 회의(4회)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 : '05. 6. 17~8. 29
 - 주민설명회 : 용인('05. 6. 24), 수원('05. 7. 18)
- 사업지구 주민대표 간담회(3회)
- 개발계획 승인신청(도→건교부) : '05. 9. 27
- 개발계획(안) 승인신청사항 건교부 사전보고회 : '05. 10. 12
- 광고테크노밸리사업 관련 건교부 방문건의(도지사 → 건교부차관) : '05. 10. 19
 - 개발계획 승인 조속처리 및 신분당선 연장선 2010년까지 조기준공요청
- 개발계획 관련 공동시행자 실무협의 회의 : '05. 11. 1
-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제출(도→건교부) : '05. 11월초

□ 향후계획

-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확정(건교부) : '05. 12
 -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
- 개발계획 승인(건교부) : '05. 12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06. 상반기
- 실시계획승인 및 사업 착수 : '06. 12
- 주택분양 : '07 상반기
- 아파트 입주 : '09년 이후
- 사업 준공 : 2010. 12

판교 신도시 건설

-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생태도시 건설
- ◆ 벤처·업무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제공과 “職住近接”에 의한 출·퇴근 교통난 완화

□ 사업개요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외 10개동 일원
- 면 적 : 9,307천㎡(282만평)
- 수용계획 : 80,412인(26,804호) - 3인/세대당
※ 1ha당 인구밀도 : 95인(분당 199, 일산 175, 중동 304, 평촌 329, 산본 399)
- 사업기간 : 2004~2009
- 시행자 :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공동시행)

【토지이용계획】

계	주거용지	IT·업무지구	녹지·도로 등	상업용지
282만평	75	20	178(녹지 83)	9

※ '04. 12. 23 실시계획 승인 내용으로 도시지원시설용지 20만평은 IT업무지구로 개발

□ 그간 추진실적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01. 12. 20 : 건교부)
- 공동사업시행자 지정('02. 7. 19)
 -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4개 기관
-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체결('03. 9. 8)
 - 공동시행자는 면적분할, 독립회계방식으로 사업 추진
 - 벤처단지 20만평은 경기도가 주도적인 개발과 입주자 선정 추진
 - 기타 단지개발 면적은 성남시 20%, 토공 50%, 주공 30%로 추진
- 개발계획 승인(건교부) : '03. 12. 26
- 제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인구) 심의 완료 : '04. 12. 15
-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 승인(건교부) : '04. 12. 23
- 개발계획(2차) 및 실시계획(1차) 변경승인(건교부) : '05. 5. 19
 - 구청사 및 철도부지 반영
- 부동산 안정대책 일환으로 25.7평이상 택지공급 잠정보류(청와대발표) : '05. 6.17
- 개발계획(3차) 및 실시계획(2차) 변경승인(건교부) : '05. 8. 30
 - 메모리얼 파크 반영 - 16,529㎡(5천평)
-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보고(보건복지국) : '05. 10. 16
- 개발계획(4차) 및 실시계획(3차) 변경 승인(건교부) : '05. 11. 4

· 쓰레기소각장 반영 - 15,131㎡(4,577평)

□ 향후계획

- IT·업무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05. 12월
- 메모리얼파크 조성토지 무상양여 추진(주택공사→도): '05. 12월
- 공동주택 분양 : '06. 3~8월
- 공동주택 입주 : '08. 12월
- 사업 준공 : '09. 12월

주한 미군기지 평택이전 지원사업 추진

- ◆ 신 안보 전략을 위한 주한미군 재 배치
- ◆ 산재한 미군기지 통·폐합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

【사업개요】

- 용산기지 이전 : '08년까지 전체 용산기지 이전 완료
 - UNC/CFC/USFK 사령부는 '07년까지 이전 완료
- 미2사단 재배치 : 2단계에 걸쳐 한강이남의 주요권역으로 통합
 - 1단계('04~'06) : 한강이북 군소기지 동두천, 의정부지역으로 통합
 - 2단계('07년 이후) : 미2사단 주력부대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
 - 한반도 안보상황 고려 추후 한·미정상이 이전시기 결정

〈평택지역 미군기지 추가공여 내역〉

(단위 : 만평)

기지명	총면적	추가공여	기존공여지
합 계	806	349	457
K-55 (서탄)	355	64	291
K-6 (팽성)	451	285	166

【추진경위】

- '90. 6 용산기지 이전 한·미 기본합의서/양해각서 체결
- '03. 5 한·미 정상 용산기지 조기 이전 재배치 합의

- '04. 1 제6차 FOTA, 전체 용산기지 평택이전 합의
- '04. 7 제10차 FOTA, 용산기지이전기본합의서(UA) 체결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최종 합의
- '04. 12 기본합의서(UA)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안 국회비준 완료

□ 그간 추진실적

- '04. 1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05. 4. 1 시행)
 - 특별법 주요내용 : 평택시 지역개발계획 수립(행자부장관),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및 개발,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4년제 대학 이전·증설 및 외국교육 기관 설립허용, 국고보조금 인상,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등
- 주한미군 기지이전 관련 주민숙원 사업비 특별지원('05)
 - 광역상수도 설계비 8억원, 도로 확·포장(4건) 42억원
- 평택지역 주민 의견 수렴 세미나 개최('05. 10)
 -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등 중앙부처에 세미나 개최결과를 정책자료로 건의
- 주한미군 친선교류사업 추진('04. 7~'05. 10)
 - 문화·산업시찰(7회), 전통문화공연·체험(3회), 등산대회(1회)

□ 향후계획

- 주한미군 기지이전 관련 주민숙원 사업비 특별지원('06)
 - 도로개설 및 확·포장(2건) 50억원
- 주한미군 친선교류사업 추진('06)
 - 문화·산업시찰, 전통문화체험, 역사·문화강연, 친선체육대회 등 개최
-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수립 및 연차별계획수립 지원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추진
- 평택지원 국비예산 확보관련 중앙부처 협의
-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지역 부지매수 행정지원

『국제평화도시』 건설

- ◆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계기로 국제교류 및 첨단지식산업형 국제화 중심도시 모델 정립
- ◆ 평택항을 중심으로 서해안시대 대비 대중국 진진기지 교두보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평택시 일원
- 개발면적 : 약 500만평
- 수용인구 : 약 16만명(6.4만세대), 개발밀도 90인/ha
- 사업기간 : 2005.~2013.
- 시 행 자 : 경기도지사·한국토지공사 사장
- 개발방식 :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개발목표

- 환황해권 경제시대 대비 비즈니스거점 전략도시 육성
- 수도권 남부지역의 성장을 이끌 광역생활 중심도시 건설
- 자연친화적인 생태중심도시로 삶의 질 향상 기여

☐ 그간 추진실적

-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마련하고자 평택지원특별법에 국책사업 건설근거 마련(국제화계획지구)
- 예비 타당성용역 추진('03. 11.~'04. 12.)
- 지구지정 및 개발구상 수립 연구용역 착수('05. 4.~'06. 3.)

☐ 향후계획

- 국제화계획지구 지정추진(건교부) : '06 상반기
-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추진(건교부) : '06~'07
- 공사 착공·완공 : '08~'13

※ 자유도시 건설은 미군공여지역지원특별법 제정과 연계추진

IV. '0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위원회명 : 건설교통위원회

☐ 처리현황

(건수)

부서명	요구사항				처리결과		
	계	시정	처리	건의	계	완료	추진 중
합 계	3		2	1	3	2	1
지역정책과	2		2		2	1	1
도시계획과							
주 택 과							
토지정보과							
신도시 개발지원단	1			1	1	1	
주한미군이전 추진 지원단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 처리요구사항(2건)

- 8-9 그린벨트훼손부담금에 대한 시·군 지원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지역정책과)

⇒ 시·군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부담이 되는 훼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제도개선 건의('00. 4. 26~'05. 1. 19 : 7회)하였으며 시·군별로 주민지원사업비 등 국비지원 신청시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 훼손부담금 징수비율 등을 고려하고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시·군별로 골고루 배분되도록 건교부와 긴밀히 업무협의 추진(완료)

- 8-10 지구 지정을 받아 놓고 2년이 경과하고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5개 온천에 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토지의 이용도 측면에서 조속히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지역정책과)

⇒ 최근 도입된 개발계획수립 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개발계획 미수립 온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행 요청하는 한편, 미이행시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부처(행정자치부)에서도 온천개발사업자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요 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해 건전한 온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또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해당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온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온천개발계획승인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음.(추진 중)

□ 건의사항(1건)

- 8-46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안양시의 과밀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의 부당성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신도시개발지원단)

⇒ 안양 관양지구 등 국민임대주택건설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 등에 과밀지역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의 부당성 건의로 법령개정 추진.(완료)

o'05. 1. 10 : 건설교통부장관 방문 면담건의(도지사)

- 주택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권한 도지사 위임, 도시슬럼화 방지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50% 이상→20% 이하), 단지 규모 100만㎡ 이상으로 하여 도시기반시설 확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해당 지자체장의 건개진기회 부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의무화 등
- '05. 3. 31 : 건교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건의(도→건교부)
 - 해당 도지사의 의견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서면심의 지양, 경기도에서 수립한 「수도권 계획적관리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택지개발추진 등
- '05. 10. 13 : 경기도 지역출신 국회의원 조찬간담회 건의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경기도 의견 법률개정(안) 반영
 - 도시슬럼화 방지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비율 하향조정(50% 이상→20% 이하)
 - 단지 규모 대형화(100만㎡ 미만→ 100만㎡ 이상)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해당 지자체장 의견개진 기회 부여
 - 지자체 의견 반영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무화 등
- '05. 11. 2 : 개정(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결

〈법령개정(안)〉

1. 국민임대주택 단지규모 확대 : 100만㎡ 미만 → 200만㎡ 미만
2. 국민임대주택 비율 축소 : 50% → 40%(100만㎡ 초과분에 한함)
3.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만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건설된 부도임대주택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4. 주거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을 같이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함
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수렴 의무화